

---

## 축산식품 위생관리 체계 개편에 대한 대처방안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I. 시작하며
- II. 외국의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 사례
  1. 일본
  2. 캐나다
  3. 독일
  4. 덴마크
- III.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 방향
  1.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의 선행조건
  2. 우리나라의 식품위생관리 체계 개편 논의 동향
  3.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 방향
- IV. 맺으며

### 곽 형 근

---

- 서울시립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농림부 국립동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 사무관
- 농림부 가축위생과 서기관
- 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

# 축산식품 위생관리 체계 개편에 대한 대처방안

## I. 시작하며

최근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리면서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식품위생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품목별로 통합이 논의되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은 주로 전체 식품에 대한 통합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의 논의 성격이 이처럼 달라지게 된 것은 최근 선진국의 식품위생관리 조직이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전체 식품생산·유통(Food Chain)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개편되고 있으며, 1997년 축산식품 위생관리가 농림부로 일원화되면서 더 이상 품목별 통합논의는 그 의미가 미미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축산식품뿐만 아니라 전체 식품위생관리 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식품위생관리 체계 개편을 수행한 선진국 사례중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축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위생관리 체계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외국의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 사례

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는 (1) 현행 조직을 존치(存置)하고 조직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2) 품목별 조직을 기능별로 통합·재편하는 방안 (3) 식품위생관리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되 기능별로 별도의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4) 완전한 하나의 통합적 식품위생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대략 4가지 모델(Model)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식품위생관리 모델을 비교적 충실하게 실시한 국가로는 일본, 캐나다, 독일, 덴마크로 외국의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 사례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일본

일본은 현행 조직을 존치하고 조직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은 1990년대 중반이후 *E.coli O157:H7* 식중독 사건, 설인유업(雪印乳業)의 가공유 오염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2001년 광우병(BSE) 파동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조직개편 논의가 전개되었다.

조직개편 논의는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우병(BSE)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sup>1)</sup>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2002년 4월 2일 조사검토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식품위생 조직개편 방향을 “유럽 각국이 식품안전기관을 재편성한 것을 참고로 하여, 위험평가 기능을 중심으로 독립성·일관성을 갖고 각 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갖는 새로운 식품안전행정기관을 설치한다”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상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sup>2)</sup>”를 갖고 현행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조직은 존치(存置)하되 부처간 조정기능(권고 권한<sup>3)</sup>)과 위험평가

1) 조사검토위원회는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10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었음.

2) 이 각료회의는 내각관방장관이 주재하며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총무성 등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요미우리 신문('02년 5월 24일자)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식품안전위원회에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권고기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

기능을 갖는 식품안전위원회를 내각부(內閣府; 총리 직속기관)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는 당초 일본 언론 등에서 예상하였던 대폭적인 개편방안, 예를 들면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조직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식품위생관리기관인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방안과는 달리 기존 조직의 통폐합 없이 식품안전위원회라는 조정기구 설립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또한 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의 구축의 한 모델로서 평가될 수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2003년 국회에서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이 통과된 올해 7월에 발족하였다. 식품안전위원회는 250~300명 인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권고의 필요성 등 정책 결정을 실시하는 7명의 위원회<sup>4)</sup>,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식품이나 첨가물, 농약, 사료 등 분야별 위험평가를 위한 약 200명의 전문조사위, 약 80명의 상근·비상근 직원의 사무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안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위험평가, 부처권고기능 및 식품사고 등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 국내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수집·정리 및 폭넓은 의견교류 등이다.

## 2. 캐나다

캐나다는 품목별 조직을 기능별로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 캐나다의 식품위생 조직개편 논의는 예산 적자와 효과적으로 식품위생 조직들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부와 업계의 요청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캐나다는 약 5년간 부처간의 협의, 공청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조율 및 수렴과정을 거쳐 1996년 “품목별 위생관리체계에서 기능별 위생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식품위생관리 조직개편(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기능별 개편을 위하여 과거 보건부, 농업식품부, 수산해양부<sup>5)</sup>로 3원화되어 있던 품목별 관리 체계를 기능별로 위생관리·검사 분야는 농업식품부로 통합하면서 1997년 4월 통합적인 식품위생관리기관으로 농업식품부 산하에 독립적 성격의 식품검사청<sup>6)</sup>을 설립하였고 안전성 평가·기준설정 분야는 보건부로 통합·개편하였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조직개편의 특징은 여러 부처로 주로 품목별로 나뉘어 있던 식품위생업무를 최대한 통합하되 기능별로 통합함으로써 최소한의 상호견제는 가능케 하는 통합방식이었다.

즉, 캐나다는 3개 부처로 품목별로 식품위생업무가 나누어 있던 것을 1개 부처로 완전히 통합한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식품위생업무를 2개 부처로 통합 및 재편함으로써 “통합과 분권”의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이다. 이는 위생관리업무, 위생기준설정 및 평가업무가 1개 부처에 집중될 경우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상호견제와 분권화를 추구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 3. 독일

독일은 식품위생관리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되 기능별로 별도의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한 국가로 독일은 과거 연방보건부가 식품위생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연방식품농림부는 동물전염병예방, 사료·농약 관리 등 주로 가축방역과 농림수산업 진흥위주의 정책을 담당하는 식품위생관리체계를 유지한 나라이었다.

그러나 2000년 독일에서 광우병(BSE)이 발생됨에 따라 식품위생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4) 위원회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최종 결정기구임

5) 보건부의 영문명칭 : Health Canada, 농업식품부의 영문명칭 :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수산해양부의 영문명칭 : Fisheries and Oceans Canada

6) 식품검사청의 영문명칭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광우병(BSE)이 발생되자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의 관리체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총리이었던 슈레더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에 착수하였다.

2001년 1월 단행된 독일의 조직개편은 과거 연방보건부<sup>7)</sup>에서 담당하던 식품위생, 도축장 위생관리, 수입식품 검역, 소비자보호 등 거의 모든 식품위생업무를 연방식품농림부로 이관<sup>8)</sup>하게 함으로써 연방식품농림부가 단일한 통합적 식품위생관리기관이 되었다.

조직개편이후 통합위생관리기관인 연방식품농림부는 부(部) 명칭을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sup>9)</sup>로 개칭하고 2002년도에 위생관리업무(Risk Management)를 담당하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과 안전성평가(Risk Assessment)를 담당하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를 산하 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독일의 식품위생관리체계는 식품위생관리가 1개 부처로 통합되면서도 기능별(위생관리 및 안전성평가)로는 각각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 4. 덴마크

덴마크는 완전한 하나의 통합적 식품위생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한 국가로 덴마크의 식품위생 조직개편은 1990년대 초 식품위생의 일부 영역에서 부처간 중복 또는 공백이 있고 부처간에 일치되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다.

1995년 조직개편이 시작되기 이전 덴마크의 식품위생 체계는 보건부, 농어부, 수산부로 3원화 되어 있었다. 보건부<sup>10)</sup>는 식품안전기준제정 및 소매유통분야의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농업부<sup>11)</sup>는 축산식품 위생관리 분야를 맡았으며, 수산부<sup>12)</sup>는 수산식품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95년 덴마크 전국과학위원회<sup>13)</sup>는 보고서를 통하여 식품위생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관련 법령·조직·관리체계를 단순화(Simplify)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1996년 5월 소비자, 농가 및 업계의 대표들 또한 당시 총리에게 식품위생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덴마크는 농업부와 수산부를 통합하여 농수산부를 출범시켰으며, 1996년 12월에는 보건부의 식품위생분야 또한 농수산부로 이관되어 농수산부가 통합위생관리기관이 되면서 부(部) 명칭을 식품농수산부<sup>14)</sup>으로 개칭하였다.

1997년 7월 통합위생관리기관인 식품농수산부는 통합된 식품위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 식품청<sup>15)</sup>, 식물국<sup>16)</sup>, 수산국<sup>17)</sup>이라는 3개의 조직을 설립하였다. 이중 수의식품청은 식품검사, 식품위생기준설정<sup>18)</sup>, 표시기준, 가축방역, 동물약품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식품위생 분야를 총괄하며,

7) 영문명칭은 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임

8) 업무 이관 후 연방보건부에 주어진 업무는 동물용의약품허가, 수의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사실상 식품위생 업무에서 연방보건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었음

9) 영문명칭은 Federal Ministry of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culture임

10) 영문명칭은 Ministry of Health임

11) 영문명칭은 Ministry of Agriculture임

12) 영문명칭은 Ministry of Fisheries임

13) 영문으로 Danish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임

14) 영문명칭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임

15) 영문명칭은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이며, 과거 보건부의 국립식품청(Danish National Food Agency)과 농업부의 수의원(獸醫院)(Danish Veterinary Service)이 통합된 기관임.

16) 영문명칭은 Plant Directorate임

17) 영문명칭은 Danish Directorate for fisheries임

18) 예를 들면 잔류허용기준 설정임.

식물국의 주요업무는 식물위생과 품질관리로 종자·곡물·사료 검사를 담당하고, 수산국은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물위생관리<sup>19)</sup>를 담당한다. 또한 식품농수산부는 과거 품목별로 나뉘어 있던 다양한 지역별 사무소<sup>20)</sup>를 11개의 지역검사사무소<sup>21)</sup>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의식품청에서 직접 관할하되 식물국과 수산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하면, 덴마크는 3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식품위생 업무를 식품농수산부로 완전히 통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농수산부는 산하에 수의식품청, 식물국, 수산국을 설립하고 수의식품청에서 식품위생 업무를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 Ⅲ.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 방향

지금부터는 이러한 외국 사례와 우리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및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선행조건을 검토해 보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관리 개편 논의에 대하여 고찰한 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의 선행조건

우리 나라의 현행 식품위생관리체계는 1997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면개정에 따라 일반식품, 축산식품으로 크게 대별되는 품목별 통합적 조직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식품위생관리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품목별 일관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보다 진일보한 식품위생관리 체계이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도 우선 일반식품, 축산식품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적 위생관리체계가 갖추어진 후에 전체 식품에 대한 통합적 위생관리체계로 전환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전문가적 위생관리체계<sup>22)</sup>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관리 체계개편 논의는 우선 현재 우리의 품목별 식품위생관리체계가 전체 식품에 대한 통합적 위생관리체계로 나아갈 만큼 충분한 토대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재 위생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 해결책으로 조직 개편을 제기하는 것은 자칫 시행착오만 겪고 오히려 위생관리가 후퇴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농림부의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제기는 2001년도 미국 대통령식품안전위원회의 종합검토보고서<sup>23)</sup>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조직개편이 식품위생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통합적 위생관리 개편으로 나아갈 만큼의 토대가 갖추어져 있는가?

먼저 조직차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차원에서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출범하여 품목별 전문가적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약 5년간 위생관리를 수행하면서 두 기관 모두 아직까지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재정적·조직적·지역적 한계에 의하여 지역별 책임 위

19) 수산국의 위생검사는 선상검사, 하역, 경매, 집하장 및 처리장까지 담당함.

20) 과거 총 49개의 분야별 지역 사무소가 있었음

21) 영문 명칭은 Regional Inspection Offices임

22) 미국은 일반식품은 보건부 식품의약청(FDA)에서, 축산식품은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에서 관리하는 품목별 위생 관리체계이다.

23) 식품안전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Food Safety)가 2001년 1월에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한 “Food Safety Strategic Plan”을 말함

생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국가 전체의 식품위생관리조직들에 대한 통합을 논의할 만큼의 토대는 갖추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중앙차원에서 통합은 기관별 토대 구축 정도에 따라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단계별 통합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통합적 위생관리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대상이 되는 집단간에 상호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점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 코넬대학의 조 레젠스테인 교수는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식품위생 조직간의 개편 또는 통합은 반드시 문화적 통합<sup>24)</sup>까지 고려하여 한다고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그간 그의 경험에 의하면 축산식품을 다루는 조직문화와 일반식품을 다루는 조직문화는 매우 다르다<sup>25)</sup>는 것을 알았으며 이러한 이질적 집단간을 단순 통합할 경우에는 1+1=2가 아니라 오히려 1+1이 -1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식품위생관리 조직간에 공동협력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호간에 공동협력사업(Partnership program, Co-operation program 등)은 외국, 특히 전면적 통합을 실시한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일부분에서는 경쟁심리 및 피해의식까지 있는 상황이다.

## 2. 우리나라의 식품위생관리 체계 개편 논의 동향

우리 나라는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회 등 여러 기관에서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을 제기하고 있다. 논의기관이 여러 곳인 만큼 논의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고 다양하다.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에서는 '99년도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의장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3~4차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이 회의의제로 제기되었으나 명확한 의견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간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는 학교급식, GMO 등 현안 사항을 위주로 논의되었고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은 1998년 품목별 전문관리체계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건 및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이후 각종 식품위생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왔으나 금년들어 식품위생조직 개편을 포함한 식품위생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작업단(Task Force)이 구성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례 작업단이 개편된 이후 현재는 작업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으나, 통합적 식품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편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식품위생관련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정부전체 조직에 대한 개편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위생관련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업식품농촌부를 주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의 식품위생업무를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품목별 전문적 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해양수산부의 의견과 전면적 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상존(相存)

24) Food Technology 2002년 3월판 (Vol 56, No.3)에 식품위생 조직개편에 대한 글을 실었음.

25)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식육검사는 전두수 검사이며 강제적 검사이나, 보건부 식품의약품청(FDA)의 식품검사는 샘플링(Sampling)이며 임의적 검사 성격으로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은 규제적 문화에 익숙하고 식품의약품청은 자율적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을 들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가장 첨예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조정이나 의사를 표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사무처에 민생관련 작업단(Task Force)이 설립되어 식품위생 조직체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식품위생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민생관련 작업단에서는 가칭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인 조정기구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정부내의 여러 곳에서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다.

### 3.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 방향

우리 나라는 전면적·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행 조건인 조직적·문화적 토대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는 전면적 통합에 따른 그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공통적인 점은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sup>26)</sup>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는 전면적 통합방안도 제기되고 있어 장기간이 될지 단기간이 될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선행조건의 성숙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식품위생관리체계는 통합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직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과 함께 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및 방식을 우리 스스로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조직적·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해서는 우선 조직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성을 보다 치밀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위생관리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지방정부 조직의 강화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공·항만 중심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원 위생관리조직을 보다 권역별로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그간 방역 중심의 조직체계에서 위생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을 꾀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문화적 토대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동·협력 프로그램에 개발하고 제안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간, 중앙 및 지방정부간, 정부 대 민간간 Egg Safety Action Plan, Pulse Net, Food Net Plan 등 다양한 공동·합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 구축 방식은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캐나다, 덴마크 등 통합적 조직으로 개편한 국가들은 수년이상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조직개편에 따른 장·단점이 함께 검토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고통과 이익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성공적인 통합적 식품위생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언급한 사항으로 전면적 통합방식은 현재 우리 나라의 여건과 토대상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계적인 통합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선 일본의 조직개편 모델과 같이 기존 조직에 대한 개편 없이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은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정도를 보아 독일식 개편모델이나 덴마크식 개편모델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들

2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사항임